

‘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 ‘자동 폐기’

내란 198명·싹특검 196명 찬성 여 ‘당론 부결’에도 이탈표 늘어 민주, ‘외환 유치’ 추가해 재발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도 폐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한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에 따른 재의결정족수는 200명이나 내란특검법은 2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가 부족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6명, 김건희특검법 4명



8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내통 규탄대회’를(왼쪽),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8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내통 규탄대회’를(왼쪽),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다.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내란특검법 5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에도 ‘당론 부결’을 결정했는데 이탈표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결과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

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5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해 2월과 10월,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중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를 추가해 내란 일반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이날 부결돼 폐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한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

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부결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 공범들 외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결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해 민생의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형배, 대통령 경호 경찰청 이관 개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8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의 내란 사태 와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는 위헌 위법적 행태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부, 캐나다의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민 의원은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경호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참사 조사 독립성·유가족 소통 강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사진)은 8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참사 유가족들이 선출한 사람을 사조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

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부처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민생경제회복단, ‘추가경정예산’ 편성 군불

“역대급 슈퍼 추경 이뤄져야” “지역화폐·AI 등 최소 20조” 오늘 여야정협의체 첫 협의

여야와 정부가 9일 ‘국정협의체’ 첫 실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소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8일 국회에서 ‘추경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수출 둔화를 이유로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주기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며 “그래서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단장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

보다 더 심각하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윤석열 리스크와 내란 리스크”라며 “내란협외와 직권남용 피의자인 윤석열은 경제 파탄 주범이다. 이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민생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간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과 AI(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산업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 등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20조원 규모를 출발선으로 충분히 단계별로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우리나라는 현재 대내외 중첩 위기 파고를 넘고 있고 윤석열 리스크와 미국 발 정변이 겹치며 한국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위기”라며 “추경 타이밍과 속도 생명인데 정부는 여전히 1분기 상황을 보고 하겠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앞으로 추경 관련 후속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추경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생 법안과 추경 등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9일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갖는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여야는 실무회의를 통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한다.

협의체는 안건 조율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공식 출범한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우 의장 “윤, 혼란 빠트리지 말고 사법절차 임하라”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8일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는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한 말씀 드린다”고 윤을 뺐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다. 절대 사안의 본질이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사회를 바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